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비전 2030: 그 의의와 바람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7천불로서 현재의 일본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30년에는 4만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전망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앞으로의 복지지출을 이 국가들의 현행 복지지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비전 2030은 향후 25년에 걸친 초장기 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의 특성상 현실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정책목표를 끊임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25년 후의 정책목표에 대해 ‘너무 빠르다’ 또는 ‘느리다’고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국가적 장기 복지비전을 설정하고 이

를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정부는 영속적이다. 정권 초기나, 말기나도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비전 2030에 담긴 정책적 의지와 비전을 실질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남북통일 문제이다. 남북통일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장기계획 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5년 후에는 이미 남북통일을 이룩하였거나 또는 남북한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성숙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통일변수를 계획수립 과정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 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203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약 24%로서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험을 여과 없이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례를 만들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사회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으로 정보화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25년 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정보화에 따른 미래의 변화상과 정보사회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비전에 담아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실행계획의 수립, 자원 확보, 정책 추진의 지속성, 사회적 합의, 국민의 이해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전 2030은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이다. 향후 25년간의 추가 소요재원 1,100조원은 하나의 투자목표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그때 그때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투자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고 적게 얻으려면 적게 투자하면 된다. 무엇을 원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6.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1%이다. 중요한 것은 OECD 국가의 복지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과 함께 국민부담의 증가가 수반되며 이것이 비전 2030이 제안하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이다.